

KINU 통일나침반 16-01



#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2016. 01.



KINU 통일나침반 16-01

#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석(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KDI 연구위원)

2016. 01.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북한의 대외교역 추이와 경제제재 대상 .....	1
효율적인 대북 경제제재의 방향 .....	5
정책적 함의 - 대북 경제제재의 의지 .....	11
참고 문헌 .....	13



2016년 새해 실시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대외교역을 제한하고, 북한 노동력의 송출을 모니터링하며, 북한의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등 북한 당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달러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고 활발해진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논의할 때마다 언제나 일각에서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북한과 같이 고립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제재는 아무런 효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마도 이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분분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국제사회가 이러한 회의론까지를 감안하면서도 여전히 대북제재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이 글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기 위한 것이다. 물론 북한과 관련한 데이터는 언제나 불충분하고,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제재와 관련된 북한의 교역에 대해서만큼은 교역 상대방이 제공하는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들 통계를 이용할 경우 제재의 전반적 방향성을 토론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 북한의 대외교역 추이와 경제제재 대상

2010년 한국의 5·24 조치에 따른 남북교역의 종단을 계기로 북한이 북중무역의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표 1> 참조). 실제로 2010년 35억 달러에 불과하던 북중무역 규모는 2013년에는 65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2013년 이후 북한의 전체 대외거래에서 북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0% 수준에 이른다.<sup>1)</sup> 이는 현재 북한의 대외교역이 사

실상 북중무역을 의미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2010년 이후 북중무역이 확대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다.

〈표 1〉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 및 중국 방문 북한인 수 추이, 2010~2014

	교역액 (백만 달러)			중국 방문 북한인 (만 명)
	수출	수입	무역총액	
2010	1,188	2,278	3,466	11.64
2011	2,464	3,165	5,629	15.23
2012	2,485	3,446	5,931	18.06
2013	2,912	3,633	6,545	20.66
2014	2,842	3,523	6,364	18.44

자료: 한국무역협회/중국해관, 중국국가여유국 (검색일: 2016.1.11.).

무엇보다 먼저 북한은 중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무연탄과 같은 북한 내부의 전략적 자원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2010년 4억 달러 미만에 불과하던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량은 2013년에는 14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무연탄이라는 단일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매년 전체의 50%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수출 증대를 통해 획득한 경화(hard currency)를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 또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확대됨으로써 앞에서와 같은 비약적인 북중무역의 증대가 가능해 진 것이다. 다시 말해,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외거래는 무연탄과 같은 전략 품목의 대중 수출 확대가 주도하고, 이를 토대로 획득한 경화가 다

1) 여기에서는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중국세관의 북중무역 통계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한다. 다만, 지면의 한계로 인해 이 글에서 사용하는 모든 통계를 구체적인 표나 그림의 형태로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둔다.

시 대중 수입 확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체 무역규모가 확대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2〉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 무연탄 수출 사이의 그랜저 인과성 검증 결과 (2010.7~2015.11)

시차 (개월)	종속변수		인과성 유무	종속변수		인과성 유무
	수출	수입		무연탄수출	수입	
1	2.707	17.817***	수출 ⇒ 수입	1.871	8.590***	무연탄수출 ⇒ 수입
	(0.105)	(0.000)		(0.176)	(0.005)	
2	1.354	8.691***	수출 ⇒ 수입	1.175	3.700**	무연탄수출 → 수입
	(0.266)	(0.001)		(0.316)	(0.031)	
3	1.150	6.363***	수출 ⇒ 수입	1.045	2.462	무연탄수출 ..... 수입
	(0.337)	(0.001)		(0.380)	(0.072)	
4	0.883	3.985***	수출 ⇒ 수입	1.150	2.138	무연탄수출 ..... 수입
	(0.481)	(0.007)		(0.344)	(0.089)	
5	1.980	3.010**	수출 → 수입	1.399	2.513**	무연탄수출 → 수입
	(0.098)	(0.019)		(0.241)	(0.042)	
6	1.731	2.786**	수출 → 수입	1.853	3.166**	무연탄수출 → 수입
	(0.135)	(0.021)		(0.110)	(0.011)	

주: \*\*\* 및 ⇒는 99%, \*\* 및 →는 95%의 신뢰수준을 각각 의미

〈표 2〉는 이러한 사실을 데이터로 입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는 경제 변수들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계량적 기법의 하나로 ‘그랜저 인과성 검증(Granger Causality Test)’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특정 변수 A가 B를 ‘그랜저 초래(Granger Cause)’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통 ‘A는 B에 인과적 영향을 행사한다’고 판단한다.<sup>2)</sup> 그런데 〈표 2〉는 2010년 7월부터

2) 물론 그랜저 인과성이 현실의 인과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 변수 B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근거로 다른 변수

2015년 11월 사이의 월별 북중무역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에 대한 그랜저 인과성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5·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대중국 수입을 ‘일방적으로(one-way) 그랜저 초래’하는 것으로 나오며, 특히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이 대중국 수입을 ‘일방적으로 그랜저 초래’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0년 이후 북한이 무연탄과 같은 품목의 대중국 수출을 늘리고, 이렇게 얻어진 경화를 이용하여 대중국 수입을 늘려왔다는 사실을 계량적으로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그런데 이처럼 북한이 ‘대중국 수출확대→수입확대’의 수순을 밟아 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2010년 5·24 조치 이전까지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획득한 경화를 토대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는데, 5·24 조치를 계기로 이러한 남북경협을 통한 경화의 확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이전까지 북한은 남북간의 일반 및 위탁가공 교역에서 매년 실질교역흑자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강산 및 여타의 교역을 통해서도 상당량의 경화를 확보하였다. 2007년의 경우 이러한 경화의 규모는 5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3)</sup> 이러한 경화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그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여도 이에 대응하여 대중국 수출을 그만큼 증대시킬 필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5·24 조치 이후 이러한 한국으로부터의 경화확보가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 북한경제 유지를 위해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그에

---

A의 값을 먼저 조정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현실적인 인과성은 B가 A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계량적으로는 A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이후 B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A가 B를 ‘그랜저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본문의 문장에서는 ‘보통’이라는 부사가 삽입되었다.

3) 이에 대해서는 이석, “대북경제제재의 영향: 중국변수와 제재효과,” 『한국개발연구원 현안분석』, 2010.5의 내용이 자세하다.

상응하는 대중국 수출의 증대가 선행될 필요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경화 흐름의 변화로 인해 2010년 이후 북한은 앞서 언급한 상품무역 이외에 또 다른 형태의 대외거래에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노동력의 송출과 관광 등 비상품 거래의 확대가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의 <표 1>에 나타난 북한인의 대중국 방문자 수는 매우 시사적이다. 이에 따르면 연간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인의 수는 2010년 11만 명 수준에 불과하였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2011년을 기점으로 크게 점프하여 2013년에 이르면 연간 20만 명을 돌파한다. 2000년대 중후반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북한당국은 그간 이러한 북한주민의 대외적인 인적 교류에 극히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는 2010년 이후 북한이 보다 많은 경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북한 노동력의 대외 송출과 같은 정책수단을 새롭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별 달리 설명하기 힘든 것이다.

## 효율적인 대북 경제제재의 방향

이렇게 보면 2010년 이후 북한은 한편으로는 무연탄과 같은 전략적 자원의 대중수출 증대를 통한 북중무역의 확대에 집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노동력의 대외송출 확대와 같은 비상품 거래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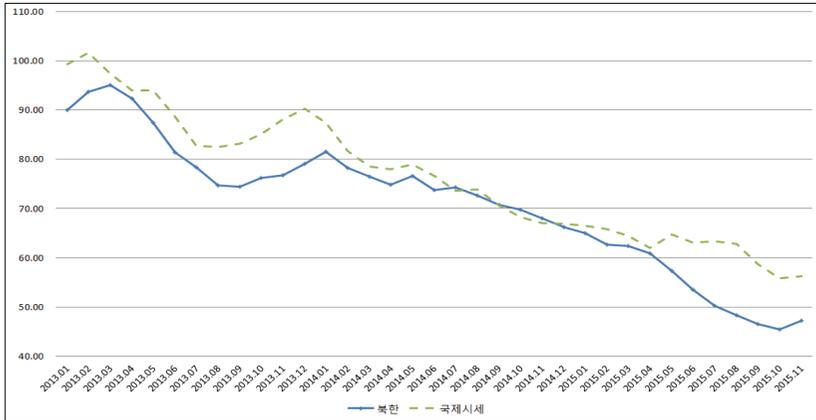
4) 중국 국가여유국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인의 수는 2007년 11.4만, 2008~9년에는 연간 약 10만, 2010년에는 본문처럼 11만 명 수준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http://www.cnta.gov.cn/>>.

를 통해 보다 많은 경화를 확보하고자 시도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국제사회가 이러한 북한을 제재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상품무역을 규제하고, 다음으로는 이차적으로 북한 노동력 송출 같은 비상품 거래 역시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인다. 아마도 북한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이러한 방식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방식이 정말 효과적일까?

매우 의외일지도 모르지만, 앞서의 북중무역 데이터들을 조금만 더 꼼꼼하고 세세하게 뜯어보면, 이에 대한 답은 긍정적이지 않다. 북한에 대한 ‘상품거래 규제 → 비상품 거래 규제’의 제재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북중무역 추세는 2013~14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어 현재에는 오히려 북한의 상품교역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변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먼저 <그림 1>을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그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을 이끌어온 무연탄의 수출 환경이 2013년을 계기로 매우 급속하게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가격은 2015년 후반의 경우 2013년 초반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이러한 단가의 하락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의 하락 폭이 점점 더 확대되어 2014년 이후에는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액 자체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림 1〉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단가(2013년 1월~2015년 11월)  
(단위: 달러/톤)



자료: 한국무역협회/중국해관 (검색일: 2016.1.11.).

그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무연탄을 포함한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이 2014년 1월 이후 2015년 11월까지 23개월 연속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2015년 3월을 기점으로 ‘급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출의 감소는 이제 북한의 대중 수입 역시 끌어내리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대중 수입 역시 201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뚜렷한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2015년 상반기 이후에는 이러한 하락세가 악화되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2010~13년 연평균 45%에 달하는 급등세를 보였던 북중무역 총액 역시 2014~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5)</sup>

5) 2014년 중국의 북중무역 통계는 중국의 대북 석유수출 여부와 관련하여 일정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논란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014~15년을 기점으로 북중무역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만큼은 분명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경향이 결코 일시적인 것이나 예기치 못한 교란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환경의 악화와 이로 인한 북한의 대중 수출 및 수입의 감소는 정확히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경기부진과 이로 인한 자원가격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2013년 이후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인 경기부진과 자원가격 하락, 중국의 성장률 둔화 현상은 단기간에 종식되기 보다는 당분간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높은 구조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2013~14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북중무역의 침체·축소현상은 당분간 더욱 호전되기 보다는 악화될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2010~13년간 꾸준히 증대해온 북한의 대외(상품)무역은, 설사 대북제재와 같은 별도의 요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분간은 이를 결정하는 제반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침체와 하락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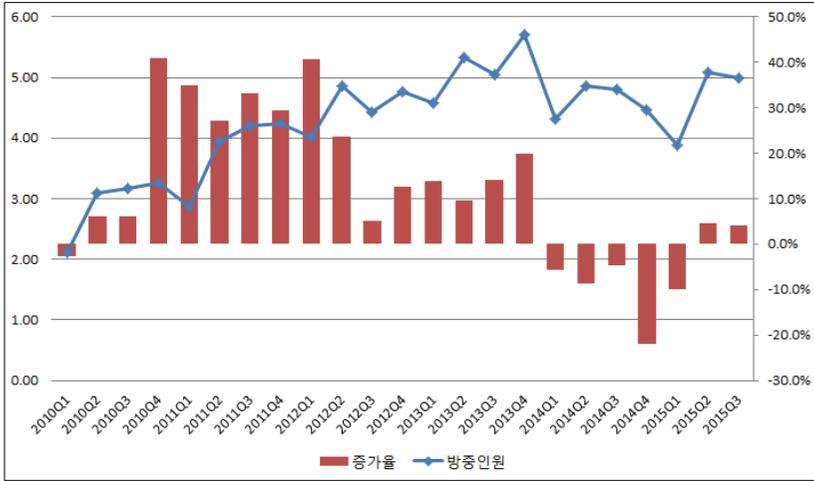
그런데 북한의 노동력 송출과 같은 비상품 거래는 이와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물론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의 경우 북한인의 대중국 방문자 수는 일시적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2015년 1분기를 기점으로 역전되어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노동력 송출과 같은 비상품 거래는 앞서의 상품거래와는 달리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되거나 또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비상품 거래가 향후 더욱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앞서서와 같은 상품무역의 침체를 만회하고 해외로부터 일정 정도의 경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송출과 같은 비상품 거래의 확대 이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표 3〉 2013년 1월 이후 북한의 월별 대중 수출 및 수입 동향  
(백만 달러, %)

	수출액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수입액 (전년동월대비증가율)
2013.01	188.8 (35.7)	281.6 (1.1)
2013.02	170.2 (-13.5)	125.4 (-22.8)
2013.03	229.1 (-0.6)	314.1 (-12.6)
2013.04	253.4 (11.6)	288.9 (-5.6)
2013.05	276.2 (8.0)	325.1 (-8.0)
2013.06	245.9 (2.7)	257.0 (-15.3)
2013.07	285.7 (29.4)	279.5 (1.4)
2013.08	202.1 (-1.4)	375.3 (40.0)
2013.09	240.3 (21.4)	351.4 (30.0)
2013.10	259.3 (38.7)	311.9 (10.2)
2013.11	272.1 (40.9)	337.0 (13.9)
2013.12	288.4 (50.3)	386.0 (33.0)
2014.01	222.5 (17.8)	323.3 (14.8)
2014.02	155.9 (-8.4)	98.8 (-21.2)
2014.03	226.4 (-1.2)	245.3 (-21.9)
2014.04	225.9 (-10.8)	301.1 (4.2)
2014.05	233.6 (-15.4)	302.5 (-6.9)
2014.06	246.2 (0.1)	311.1 (21.1)
2014.07	267.8 (-6.3)	322.9 (15.6)
2014.08	258.7 (28.0)	313.2 (-16.6)
2014.09	300.2 (25.0)	333.2 (-5.2)
2014.10	252.2 (-2.7)	332.3 (6.5)
2014.11	208.1 (-23.5)	278.3 (-17.4)
2014.12	243.9 (-15.5)	360.5 (-6.6)
2015.01	184.8 (-16.9)	208.2 (-35.6)
2015.02	158.0 (1.3)	151.1 (52.9)
2015.03	202.7 (-10.5)	204.0 (-16.8)
2015.04	207.8 (-8.0)	272.2 (-9.6)
2015.05	201.0 (-14.0)	254.4 (-15.9)
2015.06	217.4 (-11.7)	243.0 (-21.9)
2015.07	239.3 (-10.6)	266.2 (-17.6)
2015.08	245.4 (-5.2)	238.0 (-24.0)
2015.09	245.4 (-18.3)	270.7 (-18.8)
2015.10	186.7 (-26.0)	247.0 (-25.7)
2015.11	190.9 (-8.3)	275.0 (-1.2)

자료: 한국무역협회/중국해관 (검색일: 2016.1.11.).

〈그림 2〉 북한의 분기별 중국 방문자 통계, 2010년 1분기~2015년 3분기  
(단위: 만 명, %)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중국국가여유국 (검색일: 2016.1.11.).

이처럼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대외거래는 자체적인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2010~13년까지와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차별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는 북중무역을 위시한 상품무역의 침체·축소 경향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동력 송출 등 비상품 거래의 확대 노력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경향들이 추세적이라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앞서서와 같이 우선적으로는 상품거래를 규제하고 다음으로 비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는 방식이 되어야만 할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제재가 없더라도 침체에 빠져 있는 상품무역'을 우회하여 오히려 '제재가 없거나 덜한 노동력 송출 등 비상품 무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사실상 제재의 효력 범위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의 상품교역 축소가 제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일종의 착시효과에 빠져

전반적인 상황판단에 혼란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향성은 앞서와는 반대로 설정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제까지의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제재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일차적으로 북한의 비상품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먼저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상품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정책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 정책적 함의 - 대북 경제제재의 의지

이처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향과 관련하여 조금은 색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의 이야기가 과연 현실로 구현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현재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북한과 관련한 국제제재의 경우에는 언제나 제재의 결정과 이의 실행 사이에 존재하는 현실적 비대칭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제제재는 정의상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여 이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번 대북제재의 경우에도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제재의 내용과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북한의 대외거래는 사실상 북한과 중국 사이의 경제교류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결정된 대북제재의 실행 및 이로 인한 영향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치안

보적인 시각의 차이를 배제한 순수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중국과 여타 국가들의 현실적 입장이 언제나 일치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상품거래와 달리 비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인식과 정책 방향이 더욱 차이가 날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북한과 관련한 비상품 거래에 대한 제재 및 이에 연관된 금융제재, 그리고 전통적인 상품거래에 대한 제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제재가 현실로 구현되기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매우 역설적으로 같은 이유에서 이번에 논의되는 대북제재가 중국의 대북 인식 및 정책을 그대로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이 어떤 형태의 제재를,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감수하고 실시하는가에 따라 북한의 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진정한 입장이 국제사회에 정확히 각인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 글의 처음에서 언급했듯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에는 언제나 제재 회의론이 뒤따라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회의론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전면적이고, 완전하며, 스마트한 경제제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그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수많은 ‘뒷문’을 열어놓은 불충분한 제재였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의 무용성을 말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제재를 실시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6년 북핵 실험을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논의는 스마트한 효율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석진. “북한의 무역 잠재력과 개혁과제.” 『KDI 북한경제리뷰』. 2008년 5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8.
- 이 석. “북한경제와 경제제재.” 『KDI 북한경제리뷰』. 2005년 3월호, 2005.
- \_\_\_\_\_.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무역: 2000년대 일본 대북제재의 영향력 추정.” 『한국개발연구』. 2010년 II호, 한국개발연구원. 2010.
- \_\_\_\_\_.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 중국변수와 제재효과.” 한국개발연구원 현안분석, 2010.5.
- 이 석·이재호. “북한의 무역통계분석: 가용성과 신뢰성 검증.”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09.
- 朝鮮經濟問題研究 課題組. 『朝鮮經濟問題研究』. 遼寧省 金融學會, 2008.
- Graham, Edward M. “How North Korea Finances Its International Trade Deficit: An Educated Guess,” *Korea's Economy*, June 2007. Korea Economic Institute,.
- Hufbauer, Gary Clyde, Jeffrey J. Schott, and Kimberly Ann Elliott,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History and Current Policy*. IIE, 1990.
- 관세청. 남북한출입통계. <<http://www.customs.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서울: KOTRA.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각 월호.
- 한국무역협회 통계데이터베이스 중국 세관 통계. <<http://www.kita.net/>>.

중국 국가여유국 웹 사이트. <<http://www.cnta.gov.cn/>>.

United Nations Commodity Trade Statistical DB. <<http://comtrade.un.org/>>.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통일나침반 16-01

---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통일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 02-2023-8000 팩스 : 02-2023-8297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전화 : 02-2269-9917
인 쇄	2016년 01월
발 행	2016년 01월



##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